



LEGAL UPDATE

GRC센터

Apr. 2024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GRC센터에서는 정부정책 및 입법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규제분야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규제기관 등의 동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책 내용 및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등에 관해서는 **5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선 특집, 화우에서 길을 찾다' 주제로 개최되는 세미나**에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I.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 1) 공정거래 분야
- 2) TMT 및 환경-ESG 분야
- 3) 건설 분야
- 4) 노동 분야
- 5) 조세 분야
- 6) 금융 분야

II. 향후 전망

I. 22대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분야 정책 방향

22대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기조는 언제 해소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5차 중동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유가와 환율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플랫폼, 가상자산, AI 등 신기술 분야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으로 인해 국제경제와 안보 분야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 및 22대 국회는 위와 같은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할 상황인데, 총선 결과에 따른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과 여소야대 정국에서 원만한 협치가 이루어 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이에 금번 레포트에서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거래, TMT 및 환경ESG, 건설, 노동, 조세, 금융 분야 등 주요 규제분야에서의 향후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규제기관 등의 향후 동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1) 공정거래 분야

가. 플랫폼 규제

(1)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 조성”을 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플랫폼에 대해 대외적으로 “자율규제” 기조를 취해 왔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적인 입법동향에 부응하여, 특별법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는 특정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지정하여 (i) 자사우대, (ii) 끼워팔기, (iii) 멀티호밍 제한, (iv)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반칙행위를 강력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EU의 규제방식과 유사).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하고 있고, 총선 직전까지도 글로벌 OTT 업체, 음원 스트리밍 업체 등 주요 플랫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플랫폼 규제 기조를 견지하였습니다.

(2) 총선 후 전망

야당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다수의 플랫폼 규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하단 표 참조),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법 제정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야당의 공약들이 플랫폼법 제정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예컨대, 거래조건 등과 관련한 입점사업자, 창작자 등 보호 규정).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정책공약집(f)

| | |
|------|--|
| 민생회복 | 49면 <모두가 행복한 배달 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
| |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가게(입점업체)와 배달 생태계의 약자인 배달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규율 체계 마련 |
| | 74면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
| |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 규율 법제 구축 |
| 미래성장 | 181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
| | 콘텐츠 대·중소기업, 유통·플랫폼사·제작·창작자 간 공정상생의 환경 조성 |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 집행 동향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규제법안 제정 과정에서 기관 간의 플랫폼 규제 주도권 경쟁이 예상되는바(방송통신위원회 등), 규제 빈도나 수위가 증가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나. 갑을관계 규제 (하도급, 가맹사업, 대리점, 유통 등)

(1)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을 핵심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관계 관련 법률에 관해 아래와 같이 업무 계획을 밝히는 한편,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분쟁조정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습니다.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2024년 주요 업무계획 |
|---------|--|
| 하도급법 | ①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하도급법 개정) ②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 관행 점검 ③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지원 |
| 가맹사업법 | ① 필수품목 갑질 근절 ② 거래조건 변경 시 협의 의무화(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③ 필수품목 가격 산정 방식 구체화 |
| 대리점법 | ① 리뉴얼 전 계약기간 협의 ② 전속대리점 영업 보호 방안 마련 ③ 편의점, 가구, 타이어 등 민생 밀집업종 집중 감시 |
| 대규모유통업법 | ①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대규모유통업법 개정) ②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 분쟁조정 | ①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 후 제도적 장치 신설·보강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선 직전까지도 하도급법 위반(건설업에서의 대금지급 유보, 기술유용 등), 가맹사업법 위반(요식업종별 필수품목, E쿠폰 비용분담 등), 대리점법 위반(가구, 반도체, 타이어 제조판매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실시해 왔습니다.

(2) 총선 후 전망

야당은 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측면에서 ① 단체협상권 부여, ② 납품단가연동 대상 확대, ③ 각종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디스커버리제도 도입 포함)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하단 표 참고), 관련 법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정책공약집(f)

| | |
|---|--|
|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 75면 <대리점주, 가맹점주가 대기업(본사)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 |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 부여로 합리적인 거래계약 유도 |
| | 76면 <중소기업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 |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
| | 79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
| |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
| | 80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및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통한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기술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조성 | |

현행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리점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집행 동향은 총선 이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담합 조사 및 갑을관계 조사를 통해 생활밀접형 업종(식품, 의류 등)에 대해 부당한 가격인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소비자 보호 정책

(1) 공정거래위원회 기존 동향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조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세부과제로 선정하여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멜론)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넥슨은 확률 아이템 변경으로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중국발 플랫폼(알리, 테무, 쉬인 등)의 사업확장과 소비자 안전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면서 2024. 3. 13자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제로 일부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총선 후 전망

다크패턴 규제는 국제적인 추세인바, 야당의 공약집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존 업무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온라인 정책공약집(f)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74면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 이용자들의 중도해지 문제, 게임 내 확률 아이템 이슈,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은 법개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실제로 다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현안인바, 총선 이후 활발한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TMT 및 환경·ESG 분야

가. 22대 총선 이후 신기술 관련 정책 방향

여러 분야의 공약에서 AI기술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다각적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 기술이 전체 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점에 기인합니다. 관련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산업육성이 곧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최근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I 및 데이터 산업계는 관련 정책과 지원 사업 등을 유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당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는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여소야대 정국에서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스타트업 분야 규제완화 및 투자 확대 정책과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가상자산분야의 산업진흥 뿐만 아니라 투명성 도모, 제도권 금융으로의 편입 등이 정책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특히 웹툰과 K-POP으로 대표되는 대중음악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으로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포탈 등 관련 사업자들의 책임이 강화되고 각종 조치의무 등이 부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활성화로 인해 수반된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규제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산업계는 규제 논의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위기 등의 전지구적 이슈에 대해서는 양당이 모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지원 확대, RE100의 이행 지원, 전력망 확충 및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안정성 확보, 녹색금융 성장지원 등 공통 공약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구체적 이행방법과 에너지 공급방법에 대해 양당의 정책방향이 다르며, 특히 기존 원전을 계속 운전하면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여당의 공약과 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를 목표로 하는 야당의 공약이 달라 향후 정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될지 선제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세부분야 별 공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 정보통신 · 과학기술 · 모빌리티

데이터 개방, AI 적용 확대 등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를 국민 생활에 확대하는 취지의 다양한 공약이 눈에 띕니다. 또한 ICT를 기반으로 한 물류·모빌리티 분야의 첨단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및 테스트베드 구축이 예상됩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에 연구 투자 및 AI 대학원 확충 • 법률, 의료, 교통, 교육, 로봇 등의 분야에서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 •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함께 유통하고 거래하는 플랫폼 가동 • AI를 통한 유사판례 제시, 질병 예측, 지능형 CCTV,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한 현장 인파 관리 등 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에서 AI 적용 확대 • 로봇과 근로자가 협업하는 신물류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한 전용 테스트베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등 제도 정비 및 공공지원 확대 • AI 기반 초단기간 배송 구현을 위해 소규모 물류시설 고급 확대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형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술 고도화, 제로트러스트 원칙 하의 신기술 개발·확보 • 양자암호, 5G,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 분야 융합 인프라 보안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 AI 기술 중심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지원, 고성능 컴퓨팅 환경 제공 • 공공데이터 및 민관 투자 AI 학습용 데이터 전면개방,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위한 통합데이터포털 설치 및 활용 • 정부·공공서비스 등 공공클라우드의 국내 민간 클라우드 전환 적극 추진 • 생성형 AI를 포함하는 AI 기술활용 확산과 개발단계부터 부작용의 엄격한 규제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 • 자율협력주행, UAM 조기 상용화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ICT기반 국토교통 빅데이터 구축 • 드론 등 신교통을 이용한 물류체계 구축 |

다. 스타트업 육성

주요 양당 모두 신산업분야 및 미래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하여 벤처성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로 국민안전 등 필요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 • 대기업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모델 구축 • 일반 지주회사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하여 생존율 낮은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 CVC 외부자금 유치한도 확대, 해외투자 규제 완화로 해외진출 확대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R&D 예산 복원 및 확대, TIPS(초기기술기업 투자지원 프로그램)의 지방 확대 • 벤처펀드 출자 시 세제지원 확대 등으로 민간 투자 인센티브 강화 • 네거티브 규제 도입 위해 규제 목적과 범위 재정립, 내용 명확화 등 규제 불확실성 해소 • 기술거래플랫폼 확대, 기술·지식재산 유동화 확대로 딥테크 벤처기업 지원 |

라. 가상자산제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 7. 19. 시행 예정이나,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는 마련된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한 공약이 발표되었으며, 가상자산이 코인 외에도 음원, 미술품 등 다양화되면서 이를 적절히 규율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핀테크 회사 외에도 증권사 등에서 토큰증권(STO)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어 관련 입법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법제화 완료 및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규정 정비 완료시까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 •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 투자자 보호, 공시, 평가 등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전담위원회 설치 • 가상자산 유통량 및 발행량의 통일된 기준 마련, 거래소 표준 공시제도 추진 •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대상 가상자산 백지신탁 도입 • 토큰증권(STO) 입법 연내 마무리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 • 회기 중 국회의원 자상가산 거래 금지 •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 허용,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등 ISA 편입 허용으로 비과세 혜택 확대 • 증권형 토큰의 신속한 법제화,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 허용 및 조각투자 등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 |

마. 문화콘텐츠 · 방송통신 · 미디어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작비 부담 경감, 세제제도 개편 등 제22대 국회에서 정책개선이 기대되는 공약들이 주요 양당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국제공조를 통해 불법 스트리밍 등을 수사하여 콘텐츠 제작자의 저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침해를 막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및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으로 제작기반 안정화 •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및 국제공조 강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수사확대 및 처벌 강화 • 만화·웹툰 산업 지원을 위해 법 전면 개정 •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 대응, 워터마크 포함 등 식별 표시제 도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 참여로 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운영,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
|-------------|---|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상 불법유해정보(마약, 도박, 저작권침해 등)심의·차단 시간 단축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 음악·출판·캐릭터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상시제도화, 각종 공연제작 및 e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디지털 등 새로운 창작환경, 생성형 AI 데이터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물 보호체계 마련 • 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 및 민간협력 강화 |

바. 환경 · 에너지 · ESG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제22대 국회에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두겠다는 공약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충, 탄소감축 등의 큰 흐름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양당의 구체적 이행 계획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대응기금 확충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확충 • 원전·풍력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도록 전력시장 개편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 상향, 탄소저감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여 세제지원 • 탄소차액계약제도,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등 출시를 허용하여 기업의 탄소저감 유인 • 민간합동 녹색투자 펀드 조성, 기후산업 장기자금 조달 위한 녹색금융 로드맵 마련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ESG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정책금융기관 투자 또는 대출시 기업의 ESG 성과와 계획 반영, 연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 기후변화 대응계획 · 감축목표 및 이행현황 등을 정기주주총회 표결대상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Say on Climate”제도 순차도입으로 기후공시 강화 • 공공기관 ESG 경영평가 강화 • 재생에너지 계통연계의 안정성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 유연성 강화 •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 및 이로 인한 수입금 및 전력기금 등 전입금 확대로 기후대응기금 확보 • 에너지 세제도입, 탄소세 도입 공론화 및 단계적 추진 •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기후에너지부 신설, RE100이행 적극 지원 |

사. 바이오 · 제약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 분야의 ICT 접목 공약이 공통적으로 발표되었으며, 특히 비대면의료 및 맞춤형 정밀의료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대규모 보건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산업 성장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신약 및 의료솔루션 개발, 바이오 제조공정을 자동화 · 디지털화하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 국가 100만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으로 정밀의료기술 개발 지원 • 개인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
| 더불어 민주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및 개인건강기록(PHR) 등 공적정보 관리 강화 • 민감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및 공적 활용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신약개발을 위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AI 활용 지원 |

3) 건설 분야

가. 최근 건설부동산업계 현안

(1) 건설원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의 발생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의 갈등, 미국발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최근 건설업체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급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건설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은 건설사에게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부터 주요 건설 자재인 철근, 콘크리트 파일 등 금속성 자재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있었고, 2023년에는 유연탄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시멘트 및 레미콘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인건비의 상승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상승에 따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미분양증가 및 조달금리 상승 등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연과 PF사업 부실위험증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세대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관리지역을 지정하는데, HUG에 따르면, 2024년 4월 10일부터 경기 안성과 대구 남구, 울산 울주,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북 군산, 전남 광양, 경북 포항, 경북 경주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부동산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금리 상승으로 인한 PF사업의 부실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7%이지만, 이 중 증권사는 13.73%,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각각 6.9%, 4.65%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기업평가는 최근 저축은행 업권에서 향후 발생하는 PF 부실화 관련 손실이 PF 대손충당금 규모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사업장정리에 속도를 내면서, 장래성이 있는 사업장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활성화시키는 지원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나. 예상되는 법적 이슈 및 향후 전망

| | |
|-------------|---|
| 국민의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 기존 노선 신속 개통 / 신규노선 발굴 및 확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노선 : 2028년 완전 개통 추진 - B,C노선 : 2024년 상반기 착공 - D,E,F노선 : 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 대구경북신공항철도 GTX 급행철도차량 투입 |
|-------------|---|

| | |
|-----------------------|--|
| <p>국민의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압축도시로 정비 -역세권 컴팩트시티, 준공업지역, 도로 및 철도 지하화 상부공간 등 다양한 지역에 적용 |
| <p>더불어 민주당</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용적률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 신설 -현금청산자 권리 강화 추진 •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 상부는 주변지역과 통합 개발하여 지역 내 랜드마크화 -노선별 마스터플랜 수립 -상부·주변지역 통합개발 ⇒ 자족기능 갖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

양당의 공약 중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활성화 방안, 도심재개발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등 이슈는 공사비 증가와 그에 따른 사업성 확보의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4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재건축·재개발사업 현장의 공사비 분쟁에 관한 해결책 역시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정책당국과 국회에서 공사비 조정과 관련한 분쟁 및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 등 현안 문제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올지 동향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면서 사업이 멈춰선 현장이 늘어나고 있는바, 계약금액 조정청구의 당위성(근거) 및 조정기준 및 방법, 도급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이슈(해지의 적법여부, 손해배상 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PF 중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이 다수 있는 바,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의 채무인수 및 대출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담보권실행 등 분쟁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책임준공과 관련하여 대주, 신탁사, 시공사, 시행사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복잡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부실사업장의 양수도 역시 중요한 현안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공부문 정부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총선 이후 각 당이 공약한대로 GTX건설, 신공항 및 고속도로 건설 등 공공발주가 증가할 경우 공사 부분에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입찰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향후 PQ심사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실벌점 등 감점요인의 사전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따른 리스크 분산과 제재처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노동 분야

가. 여소야대 상황에 따른 입법 여건 악화

지난 해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 파견제도의 합리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의 금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제 등 노동개혁 입법은 여소야대의 입법 여건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관련 노동개혁 입법 과제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일생활 양립 지원제도 강화 등의 개혁과제와 함께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정부 여당 주도의 노동개혁 입법 추진은 어렵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타협 추진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이 성사될 경우 부분적인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될 수는 있으나, 노사 간 이해가 엇갈리는 과제가 많고 노동계의 정치 투쟁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대화 진행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대타협 성사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나. 노동계, 시민단체의 핵심 요구 과제 관련

노동계, 시민단체는 22대 총선 과정에서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특고-플랫폼 등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 3조 개정(일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주4일제 도입 및 압축노동 근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등을 핵심 요구 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야당도 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어 향후 친노동 입법 시도는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정부 및 재계의 반발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으나 야당이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재계의 반발과 함께 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 향후 전망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시대적 과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여야도 그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년연장이나 60세 이후 계속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출산과 육아, 돌봄 지원 확대 과제는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대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여야가 적절한 접점을 찾아 입법화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 공약에 대한 세부 설명은 아래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야 공통공약>

① 정년연장

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50세 이상 계속고용 활성화에 무게를 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23년 63세, 28년 64세, 33년 65세)에 맞추어 단계적, 점진적으로 60세 정년을 연장하자는 입장으로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60세 이후로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으로 국민의힘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휴일 적용, 직장내괴롭힘 개선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면 적용 입장으로 적용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찬성

③ 출산, 육아, 돌봄 지원

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인구부(인구 위기 대응부)를 신설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적용대상 및 기간 확대, 급여 상한 인상, 신청시 자동 개시,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주거 및 세제지원 등 경쟁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공약하여 방법상의 차이나 재원 마련 문제는 있으나 그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

④ 성별근로(임금) 공시제

남녀 임금 격차 해소, 육아 출산 지원을 위해 정부(여성가족부)는 기업 자율 공시를 유도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유연근무 지표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입장으로 그 필요성을 모두 공약화

5) 조세 분야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지가 현실화,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등 여러 가지 감세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2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므로 정부와 여당의 세금 정책들은 상당히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 R&D 세제 지원 확대

구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당 모두 R&D 세제 지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야당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핵심 탄소저감기술 및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기에 더하여 여당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핵심 탄소저감기술 및 재생에너지 관련 R&D 세제 지원 확대에 관하여는 양당의 입장이 일치하므로, R&D 세제 지원 확대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법인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인 24%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000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초과로 확대하여, 연간 3조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기업의 투자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양당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관련 공약을 내세우지 않았으나, 향후 양당의 논의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은 22대 총선에서도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위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금융투자소득세

여당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된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양당의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 시행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선언하였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발의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현실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졌고, 이미 한차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던 만큼 양당 합의를 통한 추가 유예 가능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 시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22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3월에 실시된 20대 대선의 영향으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시행이 유예되었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5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250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의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는 등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바, 시행 유예 또는 공제금액 상향 등에 관하여 22대 국회 개원 이후 논의 진행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물ETF 허용,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 등의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과세 쟁점이 등장할 수 있는바,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됩니다.

6) 금융 분야

가. 여야 공통 공약 관련

양당은 공통적으로 ISA 활성화 방안, 가상자산입법화, 불법사금융 근절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사한 내용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어 해당 사항에 대한 입법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상자산관련 법률 입법의 경우, 업권에 대한 규제 강도 등 금융회사별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에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경우 이미 미국에서 승인한 바 있기는 하나,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해당 논의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 공통공약>

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

- 국민의힘은 ISA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납입한도를 상향하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함
- 더불어민주당은 ISA 계좌의 투자 대상을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ISA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함
- 방법론의 차이만 있을 뿐 ISA 계좌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 추진

②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 등 세분화된 사업에 대한 규율체계마련 등을 위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제정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고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증권형 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
-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한 가상자산 2단계법 입법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③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 보호

-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무효화소송에 대한 정부지원을 공약으로 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를 공약으로 함

④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국민의 힘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감면 지원, 일시적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상환 유예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중견기업 전용펀드 조성 운용 및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상품 개발을 공약으로 함
- 더불어민주당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 포용·성장·혁신금융 등을 평가하는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한 은행권의 상생 노력 제고하여 은행의 상생금융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은행 연체율 감소 등 촉진

나. 그 밖의 공약에 대한 향후 전망

- ① 야당은 장외파생상품 개인판매 규제 강화를 위해 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려 하고, 연령, 투자성향, 경험 등에 기반하여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한도를 제한(예 : 20%)하는 규제방안을 도입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위험·고난도 상품에 대한 사전승인제 도입 및 개인별 투자한도 제한 등이 법제화되는 경우 사전승인 대상 선정 기준 마련, 절차 진행에 따르는 현실적 문제 등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혁신적 금융투자상품 개발 등에 대한 제한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 ② 또한, 야당은 금융회사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기간(예 : 3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의 경우 환수의 요건(공약상 재무제표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금융회사 임원의 장·단기 성과급의 분할 지급과의 관계, 보상위원회 결의 필요 여부 등이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③ 야당은 공정한 자본시장 확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제를 추진하려 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 ①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
- ②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강화
- ③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 도입
- ④ 금융사기전담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해 악성 금융범죄에 신속 대응
- ⑤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 근거 강화

이와 관련하여,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환수 강화가 법제화될 경우, 회사의 점검활동 강화방안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거래 확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향후 전망

22대 총선 결과 3년차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기존 정책을 이끌어나가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야당 입장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 등 여야간 협치도 그리 수월한 정치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와 같은 극한적 대치 상황에서는 의석의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나 정책추진이 쉽지 않고, 예산안 및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야당이 반대하는 국무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 행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거대야당의 입법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맞서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국회가 의결한 9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총선 패배로 향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어느정도 행사할지가 정국운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강력한 규제입법 주도권 행사도 예상됩니다.

이번 총선 이후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역동경제'를 구현할 경제 정책들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 공약 전반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시장과 산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 야당의 경우 공공성을 확대하고, 친서민적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감세' 및 '규제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코스피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증시 밸류업 조치 등]'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보입니다.

야당의 주도 하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대형마트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건설현장 등에서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 예상되며, 상생금융을 위한 정책 및 '횡재세'와 같은 조세 도입도 적극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규제의 대상이 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국회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며 규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규제 내용, 적용 대상, 시행 시점, 위험적 요소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GRC센터는 국회-정부-공공기관 등 각 분야에서 수년간 입법과 정책을 다루며 실력을 쌓아온 베테랑급 전문가들이 국회의 상임위 구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을 구축하고 기업의 정부정책 및 입법 리스크 대응 업무를 수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유한) 화우 GRC센터는 최고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국회나 정부 등을 통해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Contacts

홍정석

T. (+82) 2 6182 8103

파트너변호사

E. jshong@yoonyang.com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

박근배

T. (+82) 2 6182 8384

파트너변호사

E. gbpark@yoonyang.com

김근호

T. (+82) 2 6182 8542

파트너변호사

E. kimkh@yoonyang.com

강영민

T. (+82) 2 6182 8555

파트너변호사

E. ymkang@yoonyang.com

허시원

T. (+82) 2 6182 8120

파트너변호사

E. swhuh@yoonyang.com